

도시경관 해치는 건물 ‘우후죽순’ 이유 있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 등 이해관계 민간전문가 38% 참여 교통계획·사전 검토 규정 등 심의 운영 매뉴얼도 없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 이상이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사·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방향을 정하면서 공공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도심 난개발을 막으려고 ‘심’에서 부결되거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5년 내 재상정을 금한다’는 자체 규정을 둔 것과 달리, 광주시는 지난 2014년에서야 심의 상정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재상정 후 심의를 통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이 같은 분석이 담긴 ‘도시관리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분석을 통해 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지자체 관내에서 현재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원회 위원 38.3%는 민간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자료집을 낸 전문가들 분석이다.

광주시 건축위원회의 경우 업계 종사자 참여 비율이 40.8%, 동구 42.9%, 서구 34.4%

6%, 남구 38.1%, 북구 37.0%, 광산구 41.4%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의결된 심의사항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기본적인 운영 매뉴얼 내지 가이드라인 부존재로 위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전문성에 의존해 심의가 진행되고 심지어 심의 당시 회의장 분위기, 특정 위원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돼 심의가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는 구조라는 것이다.

사전검토를 위한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들이 회의 참석 전 안건을 파악하고 준비

■ 광주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 비율 <단위: %>

구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광주광역시	14.3	40.8	
자치구	동구	58.8	42.9
	북구	42.1	37.0
	광산구	44.4	41.4
	서구	40.0	34.6
남구	30.4	38.1	
평균	38.3	39.1	

※국민권익위는 운영가이드라인에서 ‘관련업종 종사자에 참여 제한’을 제시

할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최근 3년치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7건 중 1회

상정 15건, 2회 상정 12건, 2015년 33건 중 22건 1회 상정, 11건 2회 이상 상정, 2016년 39건 중 23회 1회 상정, 16건 2회 이상 상정됐고 특정 안건의 경우 무려 5회 이상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 수행자는 “대부분의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돼 기각되더라도 차기 심의, 차차기 심의에서 조건부 자문 또는 조건부 의결 등의 이름으로 통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시 경관을 해치는 건물 건축과 도시 개발 행위가 잇따르는 것도 심의 관련 매뉴얼 부재, 심의위원 구성에서의 업계 종사자 편중이 불러온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역인재 채용 확대되나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지역 대학 오늘 협의체 발족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19일 2차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10%대 초반에 그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18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19일 전남도 일자리관 광주은행에서 광주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대학과 2차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남과 광주의 28개 대학 기획처(실)장, 취업부서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 채용 부서장, 전라남도, 광주시 관계자 76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취업 담당 부서장 협의체가 발족될 예정이다. 양측에서 공동 회장 및 간사를 각각 1명씩 뽑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1.4%에 그쳐 지난 2015년(14.2%)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한국전력은 2316명 중 지역대학 출신 264명을

뽑아 8.8%로 가장 낮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1.3%), 한국콘텐츠진흥원(1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채용 비율은 비교적 높은 곳은 72명 중 지역대학 출신 16명을 채용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2.2%), 31명 가운데 6명이 지역대학 출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19.4%) 등이다.

이번 발족식 후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국가직무능력(NCS) 활용을 위해 전문가 특강도 진행된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성을 박사가 ‘대학의 NCS 활용 현황과 과제’를, 인제 선별·검사 대행 컨설팅 기관인 ORP 연구소의 김용운 이사가 ‘공공기관의 NCS 활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전남대의 NCS 운영 현황과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NCS 기반 2017년 채용계획도 소개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들의 NCS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활발한 의사소통 채널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장애인 고용 함께 나눠요”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용을 나누기 위한 ‘장애공감나눔행사’가 18일 광주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이 복지관에서 남구청까지 장애인화차 무장애 마을 만들기를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서 ‘더 좋은 정권교체’ 선택해 달라”

안철수 후보 최경환 비서실장 호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은 18일 “더 좋은 정권교체, 더 나은 정권교체는 호남에서 선택해 달라”고 호남의 선택을 호소했다.

최 실장은 이날 광주 북구를 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지난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이 국민의당을 만들어주셨듯이 안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광주와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국민과 함께 광주와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호남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물”이라며 “안 후보야말로 동서 갈등, 계층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비리, 부정을 청산하는 사회개혁과 미래를 대비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정신으로 협치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선거”라며 “특히 안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강조했던 정치인의 덕목인 ‘서생적 문제의식’과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짧은 시간 내 치러지는 대선에 근거없는 흑색선전, 네거티브 공방으로 국민적 검증 기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혼신을 다한 정책 대결로 선거전에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선대위원장 비서실장 김명진 국민소통실장 문광석 임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김명진 대표 비서실장을 박지원 상임중앙선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와함께 문광석 국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국민소통실장으로 임명했다. 또 최원식 전 의원을 순하규 상임중앙선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부좌현 전 의원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정균 대외협력사무부총장을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배치하는 등 추가 선대위 인선을 단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방 재정 신속 집행’ 전남도 2년 연속 대상

전남도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행정자치부로부터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18일 “행정자치부의 1/4분기(1~3월)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 재정인센티브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올 1/4분기 전체 예산액 5조 2520억원 가운데 2조422억원을 집행해 38.9%의 재정 집행률을 보여 또 단위 지자체 가운데 대상을 차지했다.

행자부가 광역단위 지자체에 제시한 목표 집행률인 27%보다 11.9%포인트를 초과 달성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4%포인트나 높은 실적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사립학교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최고 30억

앞으로는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해 횡령·계약

부정·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신분보장 또는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면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지난 1월 기준으로 7663개의 사립학교와 법인이다.

교통법칙금·과태료 안내면 국제면허증 못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교통 법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는 외국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경찰청은 교통법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이었으나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 횟수 1회 0.97건, 2회 1.11건,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이상 1.49건으로 사고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경찰은 법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층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의원 환영
6층 743㎡ | 전문병의원 및 피부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절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